

‘슬픈’ 가야, 만들어진 가야

저자 (Authors)	주보돈
출처 (Source)	역사비평 , 2019.11, 121-139(19 pages) Critical Review of History , 2019.11, 121-139(19 pages)
발행처 (Publisher)	역사비평사 The Institute For Korean Historical Studies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9276824
APA Style	주보돈 (2019). ‘슬픈’ 가야, 만들어진 가야. 역사비평, 121-139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210.178.101.*** 2020/03/17 17:01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슬픈’ 가야, 만들어진 가야

주보돈

어떤 회의장

2017년의 한여름 더위가 막 절정을 지나 막바지로 치닫던 8월의 마지막 날 오후, 대한민국 국회의 의원회관 대강당에서는 여러모로 의아스럽게 비쳐질지도 모를 학술회의가 열렸다. ‘가야문화권 지역발전을 위한 포럼’이란 조직체가 주최하고(스스로 가야문화권에 속한다고 여긴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의 일시적 모임이었던 듯하다),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가 주관하며, 국토교통부와 문화재청이 후원하는 모임이었다. 내걸린 큰 주제는 〈가야사 전시회 및 세미나—잊혀진 가야사, 영호남 소통의 열쇠로 거듭나다〉였다.

전체 회의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1부는 여야(與野)가릴 것 없는 국회의원 주축의 각종 의례적인 정치성 행사였고, 2부 순서가 학술의 이름을 빌린 본회의였다. 겉으로는 학술이란 이름이 버젓이 걸렸지만, 주최나 주관 및 전반적인 진행 양상으로 미루어 기실은 2부보다 1부에 한층 더 무게가 실린 기획이었다. 당일 회의장은 그야말로 참가자로 넘쳐날 정도로 풍성함의 극치를 보였다. 좌석은 사람들로 가득 찼는데, 그럼에도 약간 과장해

표현한다면 입장하지 못한 채 바깥에서 서성이든 인과가 더 많다고 여겨질 정도였다. 일단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으로 진단하면 전례 드물게 대성황을 이룬 회의였다고 평가해도 무방할 듯싶다.

그렇지만 실제로 진행된 회의의 내용이나 구성 전반을 들여다보면 학술성은 매우 박약(薄弱)한 반면 정치성을 너무도 짙게 풍기는 행사라는 것이 문제였다. 첫째, 1부에서 50여 명을 훨씬 웃도는 정치인들(국회의원들과 지자체장 및 그에 준하는 위치의 사람들)이 참석해 대부분 맨 앞자리를 차지하여 마치 자신들이 주도함을 한껏 뽐내려는 듯했다는 점이다. 어떤 학술회의장에서도 보기 힘든 정경이었다. 학술성은 애초부터 뒷전으로 밀려나 있었다. 행사가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된 것만 봐도 그런 사정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게다가 2부의 학술회의조차 결과적으로 그런 분위로부터 그리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학술은 차라리 정치를 위한 완전히 들러리 성격이 강하였다.

정치인들은 마치 오래도록 행사의 개막을 애타게 기다려왔다는 듯이 앞다투어 축사를 하고, 마스크 착용의 증명사진을 마구 찍어댔다. 그들에게선 회의장을 얼굴 내밀기 위한 절호의 기회로 여겨 적극 활용하려는 듯한 분위기가 물씬 묻어났다. 아니나 다를까, 1부 행사가 끝나기 무섭게 정치인들(지방자치단체장 포함)은 곧장 바쁘다는 핑계를 대면서 썰물 빠지듯 회의장을 뒤로 하고 사라져갔다.

그처럼 일정이 빠듯하면 애초부터 참석하지를 말 일이지, 행사 자체를 망치려고 작정한 꼴처럼 비쳐졌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들을 뒤따라 물러나가자 회의장은 즉각 2/3 이상 비어버렸고, 뜨거운 열기가 급작스레 식어버려 매우 쓸렁한 공간으로 확보되었다. 남은 사람들 중에서도 순수한 의도로 자발적으로 참가한 이들은 매우 드물었다. 20여 명에 달하는 영호남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인솔 아래 반강제적으로 동원되다시피 한 사람들로서 거의

대부분이 현직 공무원들이었다. 순수한 목적으로 회의장을 찾은 방청객은 극소수였다.

둘째, 당일 회의의 후원 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와 문화재청이 내세워진 점이다. 맡은 업무의 기본 성격이 다른 두 중앙행정기관이 합작해서 후원했다는 사실은 대단히 이색적인 일처럼 보였다. 두 기관 소속 핵심 부서의 국장(局長)이 각각 토론자로 나선 사실 또한 그러하였다.

토론이 진행되자 그들 두 사람은 앞으로 당면 주제와 관련된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힘주어 피력하였다. 특이하게도 국토교통부가 문화재청보다는 재원이 훨씬 풍부해 여유가 있으므로 가능하면 지원을 주도함이 바람직하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나왔다. 흔히 회의를 주도한 기관은 대체로 한 걸음 뒤로 물러나 가능한 한 지원을 기피하는 입장을 취하게 마련인 상례(常例)에 견주어 그들의 태도는 매우 이례적으로 여겨졌다.

셋째, 내걸린 제목과 달리 발제의 내용은 특정 분야나 지역 개발과 함께 발제자 자신들이 그동안 주로 관심을 쏟아왔던 대상을 중심으로 해서 집중 지원이 절실함을 강조하는 데 초점을 둔 점이다. 앞에 내세운 주제와 별로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요구였다. 가야사 분야는 그동안 왜 이처럼 소홀히 취급당해온 것인지, 실제 가야사 연구 현황은 어떠하며, 어떤 점에서 문제를 안고 있는지 등등 가야사 실상을 제대로 복원하는 데 절실한 본질적인 문제나 장차 필히 다루어져야 할 주요 과제의 제기 등을 한껏 기대하였으나, 정작 발제에서도 그에 어울리는 내용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학술 발표 자체도 이미 정치성에 깊이 물들었다는 느낌을 떨치기 어려웠다.

발제자들은 언제라도 재정적 지원만 받는다면 마치 그동안 가야사 복원과 연구의 진전을 가로막아온 모든 장애물이 저절로 해소되기라도 하는 듯한 입장이었다. 특히 큰 주제인 ‘영호남 소통의 열쇠’와 연관되는 내용도 거

의 다뤄지지 않았다. 사실 왜 가야사 복원이 영호남 소통의 열쇠가 되어야 하는가가 당일 다루어야 마땅한 핵심 주제였는데, 그 과녁으로부터 한참 비껴나 있었다.

우려스런 예상

벌써 2년 이상 지난 과거의 어떤 회의 장면을 애써 떠올려보는 것은, 이후 가야사 복원이란 이름의 과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쉽사리 예상케 하였고 때문이다. 나는 마지막 순서로 진행된 종합토론의 좌장 자격으로서 그 자리에 참가하였으므로 현장에서 회의 진행 전반과 흐름을 줄곧 소상하게 지켜보았다. 나로서는 마치 학술회의란 이름으로 치른 한바탕 정치적 쇼를 경험한 특이한 기회나 다름없었다. 애초 좌장을 맡기로 수락한 뒤 회의 장소가 국회의 의원회관이란 사실을 뒤늦게 알고 후회하였으나 이미 옆질러진 물이었다.

하지만 순진하게도 현장에서 회의 진행을 가능하면 학술적 방향으로 이끌어야겠다는 마음을 먹기도 하였다. 특히 1부는 부득이하였으나 2부 순서는 그래도 학술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여겼다. 그쪽으로 방향을 약간만 틀 수 있다면야 반쯤이나마 참석 목적을 이룬 것인지도 모른다고 여겼다. 그러나 회의는 내가 뜻한 바대로 되지 않았다. 연구자들까지 벌써 정치성에 일정 정도 오염된 자세로 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일의 회의는 어떤 정치적 의도가 개입될 때 학문적 순수성을 유지하기 무척 어려움을 절절이 깨닫게 한 지루하기 짝이 없는 시간이었다. 돌이켜 보면 나로서는 참담하기 이를 바 없는 참으로 거북한 자리였다. 여하한 명분

으로라도 그런 회의에 참여하는 자체가 잘못이었다. 앞으로 그런 성격의 회의에 다시는 참가하지 않으리라 다짐하였다.

나는 좌장으로서는 회의를 마무리짓는 최후의 발언에서 앞으로 벌어질 일을 예측하면서 일말의 기대랄지, 혹은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연구자들은 모름지기 순수한 학문적 입장을 견지해야 마땅함을 힘주어 말하였다. 한편 관계당국을 대상으로 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사항을 각별히 명심하도록 거듭 당부하였다.

하나는 이번 기회를 적절히 활용해서 어쨌든 영구하게 소용될 만한 기초 자료에 대한 조사와 정리에 집중 투자하고, 이를 철두철미한 자세로 집행 하였으면 한다는 바람이었다. 복원이니 정비니 하는 이름의 토목사업을 선 불리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

다른 하나는 가야사 분야를 재정립하려면 아무래도 기성 연구자 중심으로 과업을 추진해서는 곤란하며, 모쪼록 멀리 내다보는 안목을 갖고 참신하고 능력 있는 젊은 연구자를 양성하는 쪽에 무게 중심을 두어야 한다는 취지의 희망 사항을 곡진하게 피력하였다. 그것이 장차 가야사 복원 과제의 핵심적 고리가 되어야 함을 각별히 강조하였다. 앞으로 어떤 경우에라도 가야사 연구의 관심과 맥이 끊어지거나 내용이 과장되고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두 가지 사항은 이미 앞서 기회가 닿을 때마다 몇 차례 강조해온 것이기도 하였다. 내가 그날 회의에 참석할 것을 굳이 변명삼아 말한다면, 바로 공개된 석상에서 그를 토로함으로써 널리 공유하려는 의도도 깔려 있었다. 그렇지만 아무리 힘주어 되풀이해 말해도 결과적으로는 마치 ‘쇠귀에 경(經)을 읽은 것’과 같았다. 혹여 정치성이 강한 자리에서 말하면 어느 정도 파급 효과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일말의 기대감을 가졌으나 이후의 진행을 보면 아

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한 실패였을 따름이다.

회의가 끝난 뒤의 귀갓길에서 앞날에 대한 걱정이 앞섰다. 장차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가 이미 예견되었기 때문이다. 전반적 추세로 미루어 모를 지기 순수함을 견지해야 할 학문이 현실 정치에 이용당한다거나, 아니면 연구자들마저 자발적으로 능동적인 입장에서 그를 적절히 활용하려 마구 달려들 공산이 감지되었다.

일반인들 대부분은 물론 연구자들조차 그날 회의가 어떤 과정과 배경 아래 마련되었으며, 어떤 의도가 밑바탕에 깔려 있는가 등을 제대로 간파하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아 보이지 않았다. 너무 멀리까지 나아간 편견일지 몰라도, 가야사의 복원이란 이름으로 당해 지역의 개발과 관련된 재원을 확보하게 될 때 여하히 거기에 동참할 수 있을까 하는 데만 오로지 골몰한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려웠다.

국책사업에 열을리는 지자체들

그날 회의가 열리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일단 ‘100대 국책사업’이었다. 2017년 5월 초 새로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두 달쯤 지난 뒤 7월 19일, 앞으로 5년간 추진해 나갈 ‘100대 국책사업’을 발표했는데 거기 가야사 복원이 과제의 하나로 포함되었던 것이다. 새 정부 들어서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가야문화권의 범주에 드는—혹은 사실과는 상관없이 그렇게 여기고 싶은—여러 지자체들은 앞다투어 가야사 복원 및 가야문화 관련 주제를 ‘100대 사업’에 포함시키기 위해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그에 대비한 각종 기획을 꾸렸다.

당시 몇몇 지자체들은 가야문화권 개발사업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까지 주장하면서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여론화 작업을 즐기치게 벌여나갔다. 물론 그들에게는 타당성 여부를 떠나 그럴 만한 나름의 이유와 명분이 있었다.

사실 그동안 몇 차례에 걸쳐 정권이 바뀌면서 신라나 백제의 역사 및 문화와 관련하여서는 국가적 차원의 지원과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 마련되고 이를 근거로 해서 특정 지역 대상의 지원이 상당한 수준으로 이루어졌다. 그 밑바닥에는 순수성보다는 정치성이 짙게 깔렸음은 물론이다. 70년대 초부터 신라 왕경이었던 경주시를 역사관광특구로 지정하고 보문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이 추진된 적이 있었다. 옛 백제 지역의 경우 국민의 정부 시절 전통문화학교(현재 대학)를 하필이면 자그마한 부여군에다 설립한다든가, 백제의 재현을 내건 문화단지를 조성하는 사업 등도 바로 그런 대표적 사례로서 손꼽을 수 있다.

게다가 직전의 정부는 신라 왕경의 복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그에 따라 왕경추진단을 별도로 구성해서 근 1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국고 지원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자 덩달아 백제문화권에서도 동등한 요구를 함으로써 옛 왕도 공주·부여·익산의 3곳을 합쳐 경주에 준하는 수준의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모두가 정치권을 등에 업고 경쟁적으로 추진한 일이었다. 그 공과(功過)는 앞으로 면밀히 따져보아야 할 대상이다.

한편, 1900년대 후반 국민의 정부 시절에도 가야문화권을 대상으로 적지 않은 지원이 이루어진 사실이 있었다. 공교롭게도 그때의 대통령을 비롯하여 국무총리 및 비서실장 등 실세의 유력 정치인이 모두 김해 김씨였다는 사실과 전혀 무관하지 않은 시책이었음은 두루 알려진 일이다.

그런데 당시 가야문화권 개발과 관련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거의 대부분

김해시 쪽에만 편중된 것이 문제를 불러일으켰다. 애초에 인근의 신라 중심 권에 건주어 가야문화권 전반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점이 지원의 명분으로 내세워졌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재원은 마침내 김해시 일방에만 집중되었다. 가야문화권에 들어가 있었으나 지원에서 배제된 여타 지역들은 즉각 반발하였다. 특히 대가야의 주요 거점으로서 여러모로 가야 문화권을 대표한다고 자부해온 고령군을 비롯한 인근의 몇몇 지자체는 김해시의 독식에 불만을 가득 품고서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약세의 지자체 단독의 힘만으로는 새로운 지원을 받기 힘들고 명분도 미약하다고 여긴 고령군은 가야문화권에 해당하는 인근의 지방자치단체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였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에 동조하는 몇몇 시군(市郡)을 규합해 상설적인 논의구조로서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 협의회’(이하 협의회)란 조직체를 결성하였다. 처음 이 모임에 동참한 시군은 문헌자료상으로 가야권역에 소속되는 것이 확실한 지역으로만 한정되었다. 당시 이 모임을 놓고서 ‘신(新)대가야연맹’의 탄생이라는 농담이 널리 회자되었다.

협의회는 중앙정부의 국고 지원을 받기 위한 활동을 본격화해가는 과정에서 새로운 정보를 입수하였다. 중앙정부로서는 내용이야 어떻든 이미 가야문화권 개발계획의 명분으로 상당한 액수를 투여한 뒤였으므로 동일한 명목으로 재차 지원하기란 무척 부담스런 일이었다. 그래서 협의회는 그런 난관을 뛰어넘을 만한 유력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러다가 만난 것이 지리산을 둘러싼 영호남 권역에 걸치는 지역 개발계획이었다.

당시 지리산권의 몇몇 영호남 지자체들은 그 일대를 관광자원으로 함께 적극 활용하기 위한 길을 모색하던 중이었다. 협의회는 가야사, 가야의 문화권을 지리산 개발계획과 접목시키면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는 데 한결 진전

된 명분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협의회가 꾸준히 노력한 끝에 마침내 양지를 하나로 엮어내 참여 지자체를 15개까지 늘림으로써 세(勢)를 크게 불릴 수 있게 되었다. 이를 처음 제안한 고령군이 줄곧 협의회 의장직을 맡았다. 협의회에는 기왕에 전혀 예기치 못한 장수·남원·광양·순천·여수 등 이른바 호남 동부권의 몇몇 지자체가 포함됨으로써 외양이 무척 커지게 되었다.

그런데 협의회에 소속되지 않았던 김해시는 처음에는 독자적인 길을 걸으려고 하였다. 김해시는 현 정부 출범 이후 ‘가야문화권 계발’이란 명분으로 지원을 받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였다. ‘중단된 가야사 2단계 조성사업의 점화’를 표방하면서 역사문화도시로 지정받기 위한 가야문화권 지원사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다른 지역 대상의 역사문화도시 특별법은 있는데 가야만 빠졌다는 이유를 내세워 그에 상응하는 법의 제정을 요구한 것이다.

바야흐로 그런 분위기에 편승해 여러 단위 지자체가 너도나도 앞 다투어 가야사 복원의 기치를 내걸었다. 각 지자체는 이를 추진하는 팀을 별도로 편성하였다. 그동안 별로 신경을 쓰지 않던 광역의 시도 차원에서도 가야사 복원 문제에 관심이 쏠리기 시작하였다. 이로써 가야사 복원과 연관된 판은 엄청나게 크게 부풀려졌다.

중앙정부의 의도—가야사 속의 동서화합

새로 출범한 정부는 그와 같은 요구를 적극 수용하려는 입장이었다. 19대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던 도중 협의회에서 후보자들에게 공약사항으로 채택하도록 요구하였다는 소문까지 들렸지만 실상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도리는 없다. 가야사 복원이 100대 과제의 하나로 선정될 무렵에는 이미 협의회의 구성 세력으로 참여한 지자체의 수가 크게 불어나 거의 25개에 달한 상태였다(현재는 대상 지자체가 무려 45개에 달한다). 여기서 빠지면 절대 안 된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여러 지자체가 맹렬한 기세로 달려든 결과였다. 협의회가 본격적으로 출범하던 초기의 실상에 견주어 너무도 달라진 면모였다. 가야 문화권의 지원을 받기 위한 엄청난 동력이 갖추어진 셈이었다.

그와 함께 관련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도 국회 차원에서 힘을 실어주는 명분으로 재빠르게 여야 구별 없이 별도의 모임을 꾸렸다. 이를 통해 협의체는 내재된 목적을 잠시 잊혀두면 그야말로 동서가 화합하고 소통하는 중심적 조직체로 거듭난 셈이 되었다.

중앙정부는 가야사 복원사업을 100대 과제에 넣으면서 ‘영호남 소통의 열쇠’란 제목에 일단 방점을 찍은 듯하다. 아마도 호남의 일부 지역이 가야 문화권에 들어간 사실이 그런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으리라 짐작된다. 협의회 결성에 참여한 호남 동부의 일부 지자체는 당해 지역이 가야문화권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면서도 왜 그런지, 심지어는 가야가 무엇인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였다. 당시 지역 주민들도 가야사의 실상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은 물론이다.

자신의 지역이 가야문화권에 속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깜짝 놀란 사람들도 적지 않았을 듯하다. 새로운 가야문화권의 설정 자체는 따끈하고 신선한 새로운 성과였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호남 동부까지 넣은 가야문화권 범위를 설정하였을 때 차칫 정치적 목적을 겨냥해 의도적으로 조작해낸 듯이 오인될 소지도 엿보였다. 과거 교과서를 통해서 6가야의 존재만 알고 있던 나이 든 사람들에게는 특히 그러하였을 법하다.

동서화합의 기치를 전면에 내건 현 정부로서는 가야 시기부터 지리산

주변 정치 세력이 문화적 기반을 함께 일군 역사적 사실은 더할 나위 없는 안성맞춤의 명분으로 활용할 만한 소재였다. 그래서 그 내용이 전 국민적 차원에서 공유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가야사 복원을 국책과제로 선뜻 선정하지 않았을까 싶다. 이제 가야사 분야의 복원사업이 국책과제로 채택된 마당에 그것을 어떻게 구현해내느냐 하는 게 숙제로 남았다. 그 일환으로서 앞서 소개한 의원회관 회의가 기획된 것이었다.

익히 아는 바처럼 영호남 사이에 가로놓인 이른바 동서 간의 지역적 갈등은 주민들 사이의 대립으로 빚어진 것이 아니었다. 특정한 시기에 특정의 정치인들이 개인의 정치적 욕심을 채우기 위해 주민들을 볼모로 조작해 부추긴 것일 따름이다. 이후 필요할 때마다 정치적으로 되풀이해 악용함으로써 그 골은 너무도 깊어졌다. 이제 치유를 위한 어떤 처방도 듣지 않을 지경에 이르렀다.

물론 그동안 이를 해소하기 위한 피나는 노력이 기울여져 이제는 노골적으로 악용하려는 경향은 현저히 줄었으나 뿌리까지 완전히 뽑힌 상태는 아니다. 그래서 간혹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불쑥 표출되곤 한다. 마음 깊숙한 데 남겨진 생채기까지 쉽게 사라지지는 않은 것이다. 앞으로 상황 여하에 따라 언제라도 재점화될 위험성을 안고 있는 셈이다. 장차 꾸준히 노력해 근원적인 해소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지역 갈등이다. 그럴 때 두 지역의 일정 부분이 한때 가야사 속에서 문화적 기반을 공유한 적이 있다는 사실 자체는 대단히 매력적인 소재가 될 수 있었다.

호남 동부 지역의 가야문화권

오랫동안 문헌자료에만 의거해 가야문화권이 주로 낙동강 서안(西岸)의 일정 지역에만 국한된다고 이해해온 것이 일반의 상식이었다. 그런데 고고 발굴은 소백산맥을 넘어서 섬진강 유역과 금강 상류 일대, 그리고 전남 남해 연안에 이르기까지 가야 계통의 무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혀주었으며, 거기에서 나온 유물 또한 이를 뚜렷하게 증명해 주었다. 가야문화권이 기록 상 확인되는 범위를 훌쩍 뛰어넘는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이른바 호남 동부 지역이 5세기부터 6세기 전반에 걸치는 일정 기간 동안 가야문화의 세례를 크게 받았다는 사실이 처음 주목을 끈 것은 1980년대였다. 하지만 당시에는 아직 고고 자료가 매우 빈약하고 단편적이어서 긴가민가하던 상황이었다. 그러다가 1990년대 이후부터는 호남 동부 지역을 대상으로 활발히 진행된 고고 발굴 결과 자료 축적이 꾸준히 이루어짐으로써 사실이 명백해졌다. 이제는 이들 지역이 가야문화권에 속한다는 사실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논자는 전혀 없다고 단정해도 좋을 듯하다. 가야사·가야문화에 대한 기존의 교과서적 이해는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해진 상태이다.

호남 동부 지역 가야문화권에 나타나는 양상 전반은 구체적으로는 고령 중심 대가야 문화의 요소였다. 1992년 발굴되어 최근 사적(史蹟)으로 지정된 전북 부안 죽막동(竹幕洞)에서 대가야 계통의 제사 토기가 출토되어 한때 크게 주목을 받았다. 그렇지만 단발성에 그친 자료인 까닭에 거기에 내재된 진정한 의미는 더 이상 선명히 밝혀지지 않았다. 그에 견주어 지리산 자락 일대에서는 대가야 계통의 유구와 유물이 지속적으로 다량 확인된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다만, 그와 같은 실태 속에 당대의 어떤 실상이 반영되었으며, 역사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점 등을 학문적으로 구명하는 작업은 앞으로도 꾸준히 추구되어야 할 숙제이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매우 성급하게 결론을 이끌어내기도 한다. 어떤 연구자는 즉각 대가야의 정치적 진출과 지배의 영역으로 풀이하는가 하면, 또 다른 어떤 논자는 무조건 각 지역의 독자성만을 유난스레 강조하고 나아가 현재의 특정 지명을 매개로 삼은 가야 국명을 새로 창안해 사용하기도 함으로써 극명한 이해의 차이를 보였다. 심지어 ‘전북가야’란 유별난 용어까지 스스로없이 만들어내기도 하였다.

아직 이 지역 가야사 연구 성과가 충분히 숙성된 상태가 아님에도 너무도 멀리 나아가 성급한 결론을 끌어낸 느낌이 짙다. 거기에는 만약 중앙정부의 지원을 놓고 이제 막 움트기 시작한 각급 지자체와 본격적으로 결속하게 될 때, 자칫 가야사는 지역별로 제멋대로 과대 포장되고 왜곡될 엄청난 위험성이 뒤따른다. 지금까지의 추이로 볼 때 가야사 복원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다시금 가야사를 희화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지 모른다. 사실 그런 염려는 벌써 의원회관 모임을 통해 얼핏 간취된 바 있었다.

그날 이후 각 지자체를 중심으로 가야사나 가야문화와 연관된 각종 이벤트성 행사가 엄청나게 벌어졌다. 그를 전담하는 상설적인 조직이 꾸려져 온갖 정책을 다투어 마련해 발굴 조사와 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기획·추진해가고 있다.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한 전시회나 학술회의가 경쟁적으로 열렸다. 그런 과정에서 가야사와 가야문화를 다루는 전문기구의 설립도 주창되었다.

사실 이와 같은 일련의 움직임이 밑으로부터 순수하게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난 일이라면 정말 환영해 마땅한 일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가야사 복원이 국책과제로 채택된 것을 절호의 기회라 여겨 마치 하이에나 처럼 막무가내로 달려드는 모습이었다. 그렇다면 가야사 복원은 한정적·일시적 성격을 띠 수밖에 없을 터이다. 그 자체 정치성이 강한 탓에 또 다른 의미에서 엄청난 상처를 남기고 끝맺게 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다. 과거의 어떤 기시감이 뚜렷이 느껴지는 대목이다.

뒤틀린 방향성

역사적으로 가야권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곳은 물론, 아예 무관하다 시피 한 지자체까지도 협의회에 참여하겠다고 나섰다. 협의회는 역사적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세를 불리는 차원에서 마다하지 않고 받아주었다. 그래서 구성 지자체가 오래도록 15개 정도에 머물렀다가 급작스럽게 25개(앞서 언급하였듯이 현재는 45개)로 늘어난 것이다. 가야가 무엇이며 정치사회적 상황은 어떠한데 어떻게 변동을 겪고 당해 지역 문화권은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떻게 형성되는지 등등에 대한 기초적·기본적 사항은 제대로 인지하지도 못한 채 오로지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 몸부림을 칠 뿐이었다.

이런 실상을 알고 보면 정말 떨치기 힘든 어떤 처절함이 느껴진다. 애초 지자체란 정치 조직이므로 그렇다 치더라도, 연구자까지 적극 나서서 이를 조장하고 부추기는 것은 정말 걱정스럽게 여겨지는 대목이다. 역사적 실상과는 다르게 지자체의 구미에 맞추려 들으로써 심각한 수준의 역사 왜곡으로까지 나아갈 소지가 엿보이기 때문이다. 중앙정부는 당면의 영호남 지역 갈등을 조금이라도 해소해보려는 의도에서 가야사·가야문화를 매개로 상호 교류와 소통을 진작시켜보자는 순수한 취지에서 국책과제에 포함시켰

을 터이지만, 집행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방향이 엄청나게 뒤틀리고 있다는 느낌이다.

10년에 가까운 긴 기간 동안 주변의 낮은 구릉상에 마치 포도송이처럼 밀집해서 무덤들이 조영된 가야 고분군을 대상으로 세계문화유산 등재 작업이 추진되어왔다. 처음에는 대가야 고분만으로 시작하였으나 함안군과 김해시를 포함시키는 과정에서 많은 논란과 곡절의 과정을 겪었다. 마침내 문화재청의 중재로 세 지역 고분군이 함께 묶여져 현재 잠정 목록으로 등재된 상태이다.

그런데 2018년 5월 그 대상이 갑작스레 7개 지역으로 늘어났다. 여러 가지로 사전의 검토 과정을 철저히 거쳐야 마땅한 일이었지만 정치적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 결과였음이 분명하다. 이는 지역 사이의 공통분모를 찾기 힘들어 제안서 작성을 너무 곤란하게 만들었으므로 오히려 등재를 방해하는 행위로밖에 비쳐지지 않는다. 이들 사이에는 시차와 함께 성격에서 뚜렷한 차이가 나므로 함께 묶어서는 보편적 가치를 산뜻하게 추출해내기에 여러모로 어려움이 뒤따를 터였다. 심지어 그속에 가야문화가 아닌 신라의 그것까지 포함된 사실은 현실의 정치와 힘의 논리에 구애되어 기존 연구의 성과를 무시한 역사 해석의 오류라고 할 수밖에 없다.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져온 가야사 연구를 지원하고 나아가 그 문화적 기반을 학문적 입장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할 소중한 기회를 거절할 연구자는 별로 없다. 다만, 지나치게 정치성을 띠게 될 때 심각한 문제점이 뒤따를 수 있음은 언제나 경계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출발선에서부터 우려스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근본적인 문제는 연구자들이 지닌 기본 자세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야사 연구 과업이 시작된 지 겨우 2년이 지나는 사이에 여러 지자체 주

관하에 적지 않은 수의 국내 및 국제 학술회의가 잇달아 열렸다. 매우 짧은 시간 내에 성급하게 기획된 이런 회의들이 과연 어떤 바람직한 성과를 올렸으며 장차 올릴 수 있을까,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얼마나 기여할까를 냉철한 입장과 시각에서 되돌아보아야 한다. 이런 선부른 과정은 결국 가야사를 그야말로 또 다시 만신창이의 ‘슬픈’ 역사로 만들고 있다는 느낌을 떨치기 어렵다. 가야사가 찬란하다거나 많은 수수께끼를 안고 있는 신비한 역사라거나 하는 이미지는 결국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는 가야사와 그 연구 흐름을 잠시 되짚어보면 여실히 드러나는 사실이다.

‘슬픈’ 가야, 만들어진 가야사에 대한 자성

가야는 유난히 ‘슬픈’ 역사를 경험하였다. 인접한 삼국과 달리 끝내 하나로 통합된 국가를 일구지 못한 채 멸망하였다. 가야를 단일의 국명으로 이해하기도 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가야는 독자성을 지닌 여러 정치 세력이 분리된 상태로 일관하였으므로 결코 단일한 국가의 국명이 될 수 없다. 다만 서로 비슷한 문화적 기반을 공유했기 때문에 것처럼 불리게 된 것이다.

분립된 여러 정치 세력 사이에 교류와 교역을 위한 일정한 관계망이 구축되어 공통된 문화적 기반을 이루었다. 그런 가운데 내부에서 줄곧 하나로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끊임없이 이어졌지만 결국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그러나 통합되지 못한 채 일찍 멸망하였다고 해서 가야가 ‘슬픈’ 역사가 된 것은 결코 아니다. 오늘날의 역사학 입장에서 그와 같은 특이한 측면은 달리 유례를 찾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깊은 관심을 갖고 접근해볼 만한 사례 연구의 멋진 대상으로 여겨진다.

이른 시기에 멸망한 탓에 가야인들은 스스로의 삶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 이 사실이 바로 ‘슬픈’ 역사의 밑거름을 제공한 셈이었다. 때문에 인근 국가들에 의해 가야는 특정한 목적을 채워주는 수단이나 방편으로 이용당해 실상과 너무나 동떨어진 모습으로 그려졌다. 오래도록 문헌에 근거하여 가야의 역사와 문화를 지나치게 낮추고 늦추어 보려는 경향은 그로부터 파생되었다. 따라서 정치적 통합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후 엄청난 왜곡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가야사가 ‘슬픈’ 역사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다.

가야는 정치적 분립의 상태에서 신라의 공격을 받아 멸망하였다. 이후 신라사의 입장에서 정리된 기록을 통해 가야는 신라에 포섭되는 것이 당연한 필연적 운명처럼 그려졌다. 그런 기술 속에서는 가야인이 주체적으로 활동하는 모습을 찾기 어렵다.

한편 백제인이 쓴 역사책인 이른바 백제 3서(書)는 현재 실물이 전하지는 않지만 『일본서기』에 26차례 인용된 데서 흔적이 확인된다. 거기에서도 가야는 백제에 강하게 예속된 존재처럼 그려져 있다. 일본은 이를 근거로 자신들의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8세기 초 『일본서기』를 편찬하면서 소위 왜(倭)의 가야 진출과 지배라는 가설을 조작해냈다. 이 기록이 뒷날 일제가 한반도의 식민지배를 역사적으로 정당화시키기 위해 만들어낸 소위 임나일본부설의 주된 근거로 적극 활용되었음은 익히 아는 바와 같다. 가야사는 그야말로 만신창이의 만들어진 역사, ‘슬픈’ 역사로 자리매김되고 말았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가야문화권의 발굴이 이루어지면 약방의 감초처럼 언제나 뉴스에 내걸리던 공동의 표제어(標題語)가 바로 ‘이로써 임나일본부설이 극복되었다’는 풀이였다. 전 국민의 이목을 끌기 위해서였겠지만, 이

는 거꾸로 가야사에 생긴 ‘아픈’ 생채기가 그만큼 강한 트라우마로 깊이 드리워져 있었음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2000년대에는 더 이상 가야 지역 발굴 결과에 대해 임나일본부와 연관 짓는 보도가 거의 나오지 않는 것으로 미루어, 길으로 드러난 상처는 거의 아문 느낌도 든다.

대신 그런 고고 자료를 매개로 지리산 유역의 가야문화권을 새롭게 확인하고, 나아가 이를 통해 대가야가 도달한 정치사회적 상태와 국가적 성격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게 된 것은 괄목할 만한 성과로 손꼽을 수 있다. 이로써 종래 가야와 가야문화를 무조건 낮추고 늦추어 본 인식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사실 이런 성과가 제대로 착근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더 세련되고 철저히 심화된 연구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 가령 언제부터 어떤 배경 아래 어떤 과정을 밟아 가야문화권 속으로 편입되었는가, 이 지역의 정치사회적 상태는 어떠하였는가, 대가야의 중앙부와는 어떤 관계를 유지하였는가 등 등의 의문은 반드시 밝혀져야 할 핵심적 주제이다.

그런 정황임에도 이제는 거꾸로 우리 손으로 가야사를 과대포장하고 심지어 왜곡시키려는 상황에 맞닥뜨리고 있다. 기왕에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그런 우려스런 경향성이 강하게 드러났다. 자신이 발굴한 특정 자료를 애향심의 차원에서 과도하게 평가하고, 무조건 문화 수준을 높게 잡으려 하였음은 널리 알려진 바와 같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국책과제로 가야사 복원이 설정된 사실을 매우 우려스럽게 여기는 측면도 그 때문이다. 가야문화권 전역에 걸쳐 지역별로 그런 시도가 널리 확산되어갈지 모른다.

국가적 차원에서 소홀하게 취급된 특정 분야를 지원하는 것 자체는 마다하지 않더라도, 학술 분야에의 정치적 개입은 철저히 막아내야 할 대상이다. 만약 그런 요구에 쉽사리 편승하게 되면 연구자들은 그야말로 곡학아세

하였다는 비판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더 이상 가야사를 또 다른 형태의 ‘슬픈’ 역사, ‘아픈’ 역사로 만드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내부에서 스스로 만들어낸 생채기는 영원히 치유가 불가능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우리는 최근까지 중국의 동북공정이나 일본의 역사교과서 등 우리와 관련된 남의 나라 역사를 문제 삼았지만, 이제는 모쪼록 우리 안의 잘못부터 들여다보고 냉정하고 철저한 시각에서 자성해야 마땅하다. 그것이 곧 가야사를 제자리 잡도록 하는 길이거니와, 역사 연구에서 성숙한 민주시민이 굳게 지켜야 할 기본 자세이자 덕목이기 때문이다. ㉞

주보돈

현재 경북대 명예교수이다. 한국 고대사, 특히 신라사와 가야사를 주요 전공으로 삼았으며, 최근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는 역사의 대중화 문제이다. 대표 저서로는 『신라 지방통치 체제의 정비 과정과 촌락』, 『금석문과 신라사』, 『임나일본부설, 다시 되살아나는 망령』, 『가야사 새로 읽기』, 『김춘추와 그의 사람들』, 『가야사 이해의 기초』, 『한국 고대사의 기본 사료』 등이 있다.